

민선4기 1년 : 평가와 과제

조성남 / 중도일보 주필

1. 들어가며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든지 12년째에 들어섰다. 지난 95년 지역민의 손으로 지역을 이끌어 갈 단체장을 뽑은 기쁨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민선3기를 거쳐 민선4기 1년이 지난 것이다. 12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12라는 수를 변화의 수(數)로 보아 왔다는 점에서 자치시대는 이제 새로운 변곡점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12년의 시간은 지방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의 가용자원을 배분할 주인공이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중앙인사에서 지방인사로 대체됐다는 점이라 하겠다. 지역민의 민의에 의해 뽑힌 새로운 주역인 이들 지방인사들은 지역의 주요이슈실천을 내걸고 지역민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지역은 중앙집권시대와는 다른 변화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의 주역들은 지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역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해냄으로써 지역의 변화를 꾀했는데 지난 12년의 시간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민선4기에 이르는 12년의 시간이 지역에 긍정적 변화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4번의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이라 휘둘린 선거로 전락,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지난 민선4기 지방선거 역시 거대한 중앙정치세력이 지방에서 자웅을 겨룬 선거였음을 지방민은 무력하게 보아야 했다. 지금의 지방자치현실의 현주소 정치 분야뿐 아니라 경제분야 역시 중앙의 영향력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지역의 웬만한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의 주요업무중 하나가 중앙정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로비활동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민선4기에 이르는 동안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는 게 전문가와 지역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고착돼 가는 현실 속에서 지방민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지방에서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민선 4기의 당면과제를 암시해 주는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변화는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당장 보기에는 힘든 국면이나 이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다. 이 글은 민선4기 1년을 조망해 보고 남은 임기동안 더 나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지역사회구성원들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기로 한다.

II. 민선 4기 1년...미완의 진행형

대전시는 지난 6월 민선4기 1년을 결산하는 「행복한 대전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민선4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전의 시정방향은 「활기찬 도시」, 「쾌적한 생활」, 「정다운 시민」으로 정했으며 지역경제 가치창조를 비롯한 6대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대전시는 민선4기동안 「행복」을 화두로 내걸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으로 시민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점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민선4기동안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경제의 활력과 균형개발을 통해 활기찬 도시를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정다운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추상적인 비전이기도 하나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수긍할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시가 내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 삶의 질, 그리고 시민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에 대한 비전

시가 내놓은 자료에도 제기된 바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경제가 지역의 가장 큰 과제라는 점을 꼽고 있다.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히 이루어내야 할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LG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07.2)에 대전의 경제고통지수가 1위로 나타난 점을 놓고 볼 때 가장 시급한 대전시의 현안이 경제살리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대전시는 2011년을 중기목표로, 2016년을 장기목표로 한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주요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집중육성과 미래전략·신성장산업의 특화육성을 꼽을 수 있다. 과학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가 대덕특구를 지역경제의 디딤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비단 민선4기만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선4기를 이끌어가는 박성효시장은 대덕특구를 집중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덕특구육성을 위해 시는 벤처기업수를 2010년에 1500개, 2015년까지 3000개를 만들겠다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구내 산업용지를 개발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를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덕특구의 집중육성은 과학기술에서 얻는 경제적 성과를 지역경제로 연결시킨다는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전략이라고 하겠으나, 문제는 지역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대덕특구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미래의 대전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사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대덕특구와 더불어 대전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경제전략은 정보통신(IT), 바이오(BI),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산업 등 4대전전략산업육성과 항공우주, 국방, 원자력, 유비쿼터스 등 4대신성장산업육성이다. 21세기 산업발전추세로 볼때 대전시가 내놓은 4대전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은 성공할 경우 향후 대전을 키울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분야 역시 세계가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쉬운 목표가 아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업인만큼 민선4기는 물론 보다 장기적 관

점에서 추진해나가기야 할 사업임을 인식해야 하겠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구상과 함께 민선4기가 추진코자 하는 지역경제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전략이다. 둔산지구 및 유성노은지구의 개발과 서남부권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대전 원도심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아울러 대덕구는 동·중구의 원도심침체와는 또다른 소외감을 느끼면서 균형발전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문제를 지닌 시정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민선4기에서는 이 문제를 현안으로 삼고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암동을 시범지역으로한 무지개프로젝트를 비롯한 원도심살리기사업인 'U턴프로젝트' 그리고 대덕구를 위한 신탄진 프로젝트는 눈길을 끄는 정책내용이라 하겠다. 이 부분 역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 점, 그리고 도시철도1호선개통과 더불어 중·동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노력 등이 합세해 원도심이 서서히 활력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균형발전문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어떤 각도에서는 대덕특구육성이나 신성장전략산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경제현안일 수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1년의 성과를 논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시정의

핵심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진일보한 시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50만의 대전시 인구규모로 볼 때 둔산·노은지구 에 이어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서남부권을 개발 하면서 동시에 동·중구, 대덕구를 살려나간다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대전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이자 매듭이라는 생각이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대전은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실업률이 높은 데 기인한 현상으로 대전시는 무엇보다 일자리창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창출은 그 어떤 일보다 지 난(至難)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 남은 기간 여러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삶의 질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세계도시경쟁력 비교(1997)자료를 보면 도시경쟁력 상위3개 도시로 워싱턴(1위), 도쿄(2위), 파리(3위)를 꼽고 있는데 1위를 차지한 워싱턴의 경우 삶의 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경제여건에서 1위인 도쿄를 앞질렀다. 파리의 경우 '국제화'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아마도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인식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살기좋은 도시,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여건이 좋아야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경제여건이 좋아도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환경이 극도로 나쁜 도시를 살기좋은 도시라 하지 않는다. 또 문화수준이 낮은 도시 역시 사람들이 찾지 않는 도시가 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민선4기 시가 생태환경도시, 수준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정책목표라 하겠다. 시가 제시한 지표를 보면 우선 대전을 숲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10년까지 도심 녹지율을 11.5%로 만드는 동시에 3대하천수질을 개선해 생태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는 3천만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해 2020년까지 녹지율을 15.7%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금년 상반기에 올해목표인 200만 그루 중 70%인 14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고 발표했다. 박성효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3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출발부터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3천만그루나무심기와 함께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하천살리기도 민선4기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환경분야사업이다. 3대하천을 새들이 찾아들고 물고기가 뛰놀며 시민들이 수영까지

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한편 친변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아울러 시내버스공영제와 지하철호선준공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을 늘리는 등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생태·환경도시를 위한 주요사업내용이다. 친환경도시조성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하겠으나 이 역시 1·2년내 어떤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일이다. 아울러 다른 도시들에서 이 분야에 이미 성과를 거둔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이에따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태환경도시와 더불어 대전시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분야가 문화예술이다. 파리와 뉴욕 등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도시 대부분이 역사와 문화로서의 전통이 깊은 도시라는 점에서 문화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민선4기의 정책방향은 타당성 있는 구상이라 하겠다. 시가 내놓은 지난 1년간 이 분야의 주요 성과는 선사박물관·이응노미술관·둔산도서관개관 및 대전문화산업진흥원설립근거마련 등 문화예술인프리를 확충한 것을 비롯,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활성화, 엘리트체육 경기력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갑천과학문화관광벨트조성 등 새로운 관광브랜드기틀마련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갑천지역을 대전의 명소로 가꾸겠다는 갑천과 라디이스프로젝트는 문화공간은 물론 갑천과

수목원 등 자연과 대덕연구단지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9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명소다운 명소를 만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문화인프라측면에서, 그리고 대전시립예술단의 면면에서도 대전은 이미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대전시가 넘어야 할 관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전시문화예술예산의 대부분이 문화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연정국악문화회관 및 시립예술단운영에 쏠리다보니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전방위적인 지역문화예술수준향상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구도심 및 대덕구지역의 문화인프라가 서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시장 신설론도 나오고 있어 문화분야는 민선4기의 주요관심대상이라 하겠다.

3. 시민참여의식

지방자치의 양대축은 분권과 참여라 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 없는 자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선4기 대전시는 참여와 감동이 있는 시민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96

개 기관과 협력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기관마케팅을 비롯, 시·구청 연계시스템·행정파트너십강화 등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예산참여시민위원회구성, On-line참여창구운영, 시장수요현장대화 등 Off-line시민과의 열린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당연하면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앞서의 시책들이 「면피용」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시의 이같은 시책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일은 시민들 스스로 지방자치와 지역현실에 더 많은 관심과 견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4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투표율이 지난 95년 6·27 선거 때의 68.4%를 제외하고는 겨우 과반수인 50%대에 머물고 있는 점만 보아도 지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한몫을 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지역민들이 지방선거 내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회선거까지 포함하면 15년의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상당수의 지역민들이 지방자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무관심한 경우를 필자는 적잖이 목격해오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지역언론, 지역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주요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III. 민선 4기의 과제들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이행과정과 함께 그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역사문화적 풍토가 주요변수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는 서구나 미국·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가 착근되기까지는 제도를 채택하기까지의 정치적 합의와 이를 실천하려는 주민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아직은 걸음마단계라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국정의 주요정책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진정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지만, 구호상으로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어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민선4기의 지역현안과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권이 관건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합심된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4

기의 과제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과반이 넘는 인구가 몰려있는가 하면 경제력은 국부의 대부분이 이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과도한 수도권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스위스의 경우 연방수도는 베른이지만 외교의 중심도시는 제네바이며 경제문화의 중심도시는 취리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스위스가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무게중심이 지방에 있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역사가 지방분권을 확립하게 될 수 밖에 없는 풍토를 만든 점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아울러 스위스연방국민들 역시 이같은 제도를 존중하고 살려나갔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스위스는 모든 권한의 집중을 막고 우리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코뮌에 행정권한과 막강한 과세권을 줌으로써 지방분권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 민선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라는 거창한 말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특별법을 만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분권을 실천해왔다. 그럼에도 참여정부기간동안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더 늘어났다. 이는 지방이 삶의 터전으로서의 조건에서 수도권에 비해 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어떤 정책이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가운영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예산권 역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아직 요원하다는 게 지역민의 반응이다. 민선4기 들어 대전시가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와 무엇보다 재정이 관건인데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하철건설의 경우 그 막대한 비용을 지역민의 손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하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역사업에 소요되는 돈은 국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재정자주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선으로 뽑히는 지역정치인들이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의 한계가 명백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껍데기 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 주어야 지방자치가 가능하며 민선4기의 앞날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무늬만

지방자치」인 지금의 지방현실은 개선되기 힘들다는게 지방민의 생각이다.

2 지방정부 · 지역민이 해야 할 일

육동일 · 박정규교수는 민선3기를 평가하는 논문에서 민선3기의 운영성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역민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민원의 해결, 주민복지향상, 참여 및 봉사행정의 실현, 행정서비스향상과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직 제 위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과열 · 혼탁한 지방선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불협화음,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인기위주의 전시행정과 정실인사, 끊이지 않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패현상이 해결돼야 할 주요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제고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선3기의 문제점과 과제는 그대로 민선4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우선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민소환제와 같은 주민참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한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울러 유급제실시로 의회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연 집행기관

을 제대로 견제할지 의문을 품는 시민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는 대전지역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가 특정정당 일색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는 제도개선과 의회가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활동을 펴나가는 게 민선4기의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제 자치단체의 공직자도 전문가적 소양과 지식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히 민간전문가를 기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행정의 변화가 요구됨에도 잦은 인사로 인한 지방행정의 전문성결여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 시대는 어떤 분야마다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정이 요구되는 흐름에 놓여 있다. 민선4기 대전시의 주요현안 역시 전문성과 연관이 깊은 분야가 많음을 볼 때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브레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면 시민참여가 관건이다. 시민 스스로 지역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의 폭과 대상을 늘려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노력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지역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활동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언론 역시 지역 현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지방신문이 지방자치정착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이며 특히 여성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IV.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민선4기 대전시정의 주요성과와 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민선자치 1기와 2기 그리고 3기를 지나 4기 1년을 보내면서 지방민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아 왔다. 동시에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도 체험했다. 민선 4기 1년은 시가 제시했듯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한다면 남은 임기동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진행과정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이르려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과 시민들의 호응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지방자치가 떠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씩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빼

놓을 수 없으며 아울러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시민단체와 지역언론 그리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의 보다 전향적인 의식전환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한다. 민선4기 지역발전이 담보되려면 지역구성원들의 더 많은 땀과 지혜가 요구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 대전광역시(2007.5), 행복한 대전 우리의 미래입니다.
- 대전광역시(2007), 2007주요업무계획.
- 육동일·박정규(2006), 민선3기의 평가와 5·6지방선거의 전망 및 과제,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 김현주외(1997.1), 세계도시 경쟁력비교, 삼성경제연구소.
- 안성호(2005), 분권과 참여, 스위스의 교훈, 도서출판다운샘.